

통합돌봄 정책 동향과 전국 지자체 사례집

법정계획 체계·시행 100일 점검·유형별 사례 분석



춘천미래동행재단
정책개발전담

I 개요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7일 시행됨
- 본 보고서는 관련 법정계획 체계, 시행 100일 시점이 점검 결과,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재단의 향후 사업 방향 검토에 참고하고자 함

요약

- ① 통합돌봄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운영되며, 별도로 4년 주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병행된다.
- ② 시행 100일 시점 조사 결과, 국민의 42.9%가 제도 시행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 확보가 최대 과제로 확인되었다.
- ③ 춘천시는 시행 첫 달 183명이 신청해 강원도 내 최다를 기록했으며, 통합돌봄과 신설과 전문인력 배치 면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 ④ 사례는 조직·인력, 대상자 발굴, 주거 결합, 예방 프로그램, 중장년 사업, 민관 협력 등으로 유형화되며, 발굴 방식의 다양화와 성과의 객관적 측정이 공통된 흐름으로 나타난다.

II 통합돌봄 관련 법정계획 체계

1. 계획 한눈에 보기

계획 명칭	주기	수립 주체	주요 내용
통합지원 기본계획	5년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목표와 기본 방향,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 전문인력 양성, 자원 조달 및 운용
통합지원 지역계획	매년	시·군·구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대상자 발굴과 지원, 자원 조달, 관련 기관 연계·협력, 조례 개선
지역사회 보장계획	4년	시·군·구	지역 사회보장 전반의 중장기 방향 (제 6기: 2027~2030)

2. 통합지원 기본계획(법 제 5조)

-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사회보장기본법·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법 제7조)

3. 통합지원 지역계획(법 제 6조)

- 기초지자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
- 포함 사항: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대상자 발굴과 지원, 자원 조달과 운영, 공공기반시설과 자원 공급, 관련 부서·기관의 연계 및 협력, 조례 및 제도 개선

4. 지역사회보장계획 - 별도 계획이나 함께 볼 것

-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4년 주기 법정계획으로, 통합돌봄 계획과는 별개
- 다만 주기가 달라(5년/매년/4년)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학계에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2026년은 제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 수립 시점**에 해당함

참고

통합지원협의체(법 제 20조)는 별도 설치하거나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지자체의 행정·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다수가 후자를 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두 계획 체계는 실무상 연결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III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100일 점검

1. 제도 개요

제정 / 시행	2024. 3. 26. 제정 / 2026. 3. 27. 시행
대상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목적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 제공
핵심 방식	지자체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욕구를 평가하여 돌봄 패키지 설계
서비스 범위	보건의료(15조), 건강관리·예방(16조), 장기요양(17조), 일상생활돌봄(18조), 가족 등 지원(19조)

2. 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기획, 2026. 6. 15.~19. 실시

조사 항목	대상	결과
제도 시행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	일반국민 2,000명 (만18~79세)	42.9%
“들어본 적 없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	중장년층 500명 (만40~79세)	38%

별도 언론 조사(2026.5.13. 보도)에서도 통합돌봄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나타났으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응답은 51%, 이 중 가족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65%, 공공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핵심

제도의 병목은 서비스 부족이 아니라 대상자가 제도를 모른다는 데에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65%가 여전히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가 있어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행 초기 지자체의 핵심 과제는 대상자 발굴이며, 실제로 아래 IV장 사례의 상당수가 발굴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3. 정부 대응 방향

- 복지부는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체계를 도입할 방침
- 언급된 평가 항목
 -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수준
 - 사업 운영 실적, 이용자 만족도
 -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을 변화

4. 강원도 및 춘천시 현황

강원도 첫 달 실적	시행(3.27)후 한 달간 도내 608명 신청, 일평균 30.4명(시행 전 대비 4.2배)
시군별 신청	춘천 183명(도내 최다), 원주 53명, 철원 46명, 태백 41명, 횡성 32명, 평창 30명
춘천시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 비율 22.6%, 전국 평균 상회
춘천시 추진 현황	통합돌봄과 신설, 돌봄전담 인력 17명 배치 및 추가 확충 계획 전국 1호 은퇴자마을 조성 추진, 시립복지원·치매전담형요양원 등 인프라 확대
광역 지원	양구·인제 대상 광역 단위 지원체계 시범 운영, 연내 격차 해소 방안 마련 예정

춘천시의 위치

춘천시는 시행 첫 달 신청자 183명으로 도내 최다를 기록했다. 2위인 원주시(53명)의 3배를 넘는 수치로, 통합돌봄과 신설과 전담인력 배치 등 사전 준비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강원도 전체 일평균 신청자가 시행 전 대비 4.2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통합돌봄은 신청주의를 전제로 하므로, 제도가 알려질수록 신청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따라서 첫 달 실적은 출발점에 가까우며,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처리 역량과 서비스 공급 기반 확보가 다음 단계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춘천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초기 전 지자체의 공통 과제이기도 하다.

IV 전국 지자체 사례 - 유형별 분석

2026년 4월~8월 국내 언론 보도 60여 건을 검토하여 8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별로 대표 사례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한다.

유형	주제	사례 수	핵심 내용
A	전담조직·인력 확충	5	과 단위 격상, 인력 증원, 조례 개정
B	대상자 발굴	7	빅데이터 선별, 전수조사, 외부 채널 활용
C	노인일자리 연계	2	일자리 참여자를 모니터링 인력으로 활용
D	돌봄 인력 양성	6	생활지원사 양성,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E	주거 결합	5	케어안심주택, 퇴원환자 회복령 거주시설
F	예방 중심 프로그램	6	운동·원예·치유농업, AI 돌봄로봇
G	중장년 대상 사업	6	1인가구 고립 예방, 관계형성 프로그램
H	민관 협력 거버넌스	6	통합지원협의체, 마을 단위 모델, 컨소시엄

A. 전담조직·인력 확충(4~8월 주요 뉴스 분석 결과)

성남시	통합돌봄 기능 팀→과 격상, 전담인력 3명→12명 확대, 돌봄정책·지원·사업 3개 팀 구성. 보건소 내 의료돌봄팀 설치(퇴원·생애말기 환자 관리)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통합돌봄 인력 증원 추진. 행정안전부 질의로 법적 문제없음 확인
영월군	돌봄통합팀 신설. 복지부 장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함양군	경남 최초 논스톱 통합돌봄센터 운영
대구(논설)	행정복지센터 1인 체계로 운영 한계, 의료 전문성 부족한 행정직이 건강 판단을 수행하는 구조 지적

시행 초기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조직과 인력이었다. 팀 단위를 과 단위로 격상하거나 조례를 개정해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춘천시는 통합돌봄과 신설과 전담인력 17명 배치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다.

B. 대상자 발굴(4~8월 주요 뉴스 분석 결과)

지자체	발굴 방식	규모·성과
고양시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고위험군 선별 후 전수조사 (장기요양 등급 기각·각하자, 재가급여 미이용자)	1,972명 대상 방문·유선 상담
속초시	75세 이상 단독가구,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등 대면조사 미응답 가구 재방문	7,927명
청주시	읍면동 담당자와 이·통장이 직접 가정 방문	1,000명 목표
금천구	병원 2곳과 협약, 퇴원환자 즉시 연계 통합판정 절차(약 1개월) 생략하고 현장 상담 후 신속 제공	-
경주시	집배원이 고독사 위험가구 정기 방문·안부 확인 (행안부 공모)	151세대 755회 51건 서비스 연계
거창군	관내 주요 의료기관에 통합돌봄 홍보물 비치	-
시흥 배곧 1동	장기요양등급 미달자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발굴	-

시사점

발굴 방식이 행정 조사형에서 생활 접점 활용형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통장, 집배원, 병원 등 행정 외부 채널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경주시 집배원 사례는 돌봄과 무관한 기관도 접점만 있으면 발굴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천구가 통합판정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 상담 후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한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절차 간소화가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C. 노인일자리 연계(4~8월 주요 뉴스 분석 결과)

도봉구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도봉형 통합돌봄 모니터링 지원단」운영(4개월). 노인일자리 참여자 11명이 통합돌봄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 이용 현황과 건강·생활 상태를 확인하고, 구글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결과 관리.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의 일환
전남광주	취업 취약 청년 대상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직무교육 및 사회연대경제기업 16주 현장 일경험 제공 (총 15억 원 규모 사업의 일부)
춘천 (본 재단)	노인일자리 돌봄지원사업단(취약계층돌봄서비스) 내 이·미용팀 8명이 통합돌봄 직무로 이·미용 서비스 제공. 춘천시 의뢰로 수행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통합돌봄 직무로 승인받은 사항

시사점

도봉구 사례는 통합돌봄 사업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복지부가 2026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유형을 우선 실시 사업으로 지정한 것과 맞물린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고령자가 서비스 수혜자인 동시에 돌봄 인력으로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노노(老老)케어의 확장 형태에 해당한다.

재단 수행 현황

재단은 통합돌봄 수행기관은 아니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통합돌봄 직무를 이미 수행 중이다.

돌봄지원사업단(취약계층돌봄서비스) 내 이·미용팀 8명이 춘천시 의뢰를 받아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직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통합돌봄 직무로 승인받았다.

이는 위 도봉구 사례와 동일한 구조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자격 없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 참여하는 형태에 해당한다.

D. 돌봄 인력 양성·교육(4~8월 주요 뉴스 분석 결과)

기관	내용	규모
평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0세 이상 중장년 여성 대상「노인돌봄 생활지원사」양성과정. 노인돌봄 기초기술, 노년기 건강관리, 생활지원사 역할·직무. 취업 연계 직업교육훈련 이수	20명 배출
예산군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제도 이해, 대상자 발굴·연계, 인지케어 도구 활용 실습	90여 명
의령군	돌봄활동가·제공기관 종사자 전문가 양성교육. 대상 이해, 개인정보 보호, 응급상황 대응	60여 명
옥천군	읍면 통합돌봄 담당 팀장 역량강화교육 + 현장점검 병행	9개 읍면
서산 대산읍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실무교육(위기가구 발굴, 연계 절차)	10명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포럼-돌봄통합지원법 이해와 사례관리자 역할	54명

시사점

통합돌봄 확산에 따라 돌봄 인력 양성 수요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크게 두 갈래로, 신규 인력 양성(평택)과 기존 종사자 역량강화(예산군·의령군·서산)로 구분된다.

특히 평택 사례는 중장년을 돌봄 인력으로 양성하는 구조로, 인력 부족 문제와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다루는 접근이다.

E. 주거 결합(케어 안심 주택)(4~8월 주요 뉴스 분석 결과)

안산시	전국 최초 케어안심주택. 입주자 외 지역 돌봄 대상자에게도 서비스 제공, 주민 참여 돌봄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9개 특화사업·45개 연계사업 운영. 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 견학
화성시	「온 이음채」. 무장애 주거환경, 간호사·사회복지사 상주. 단기 회복형(2~4개월) / 장기 거주형(2~4년) 이원 운영
울산 북구	울산 최초. LH공공임대 1가구 활용, 65세 이상 회복기 고령환자 대상 최대 3개월. 청소·세탁·식사·방문진료+정서지원
용인시	「따숨케어하우스」. 퇴원환자 회복형 거주시설, 전담인력 배치 및 상시 돌봄체계
서울시	시니어주택 2035년까지 1만 2000호 공급(기존 2040년 8000호에서 확대). 무주택 고령자 보증금 무이자 최대 6000만원

케어안심주택은 퇴원 후 곧바로 자택 복귀가 어려운 환장을 위한 중간 단계 주거로, 단기 회복형과 장기 거주형으로 나뉜다. 춘천시가 추진 중인 전국 1호 은퇴자 마을과 연결하여 살펴볼 여지가 있다.

F. 예방 중심 프로그램(4~8월 주요 뉴스 분석 결과)

지자체	프로그램	성과 측정
금천구	「금천품은 튼튼센터」-권역별 복지관·보린주택에서 주1회 15주간 운동·건강관리·정서지원. 2개소→11개소 확대	만족도 96점 하체근력·균형·보행·유연성·약력·우울지수 개선
구리시	「초록돌봄」-원예활동 기반 인지기능 향상·정서회복집합형(다육식물·꽃바구니) + 방문형(반려식물·말벗)	노인우울척도(SGDS-K) 및 원예치료 평가 도구로 분석 2027년 확대 검토
철원군	치유농업 「돌봄 농장」 - 치매안심센터 연계 텃밭 가꾸기	-
전남도	AI 반려견(돌봄로봇) 지원. 말벗, 복약 알림, 음악·체조·퀴즈	우울감 63% 감소 우울위험군 33명 중 32명 회복 복약 준수 20%→80%
세종시	통합돌봄 서비스 만족도 조사	평균 4.7/5.0 건강개선 92%, 정서변화 95% 계속거주 의사 98%
영등포구	시행 100일-안심퇴원, 방문운동교육, 맞춤형 식사지원, 낙상제로 홈케어, 영양보호가족 휴식제도	통합지원회의 13회 약 750건 연계 안내서 1,500부 배부

시사점

예방 프로그램은 운동·원예·치유 농업·디지털 기기 등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대체로 복지관 등 기존 시설을 거점으로 운영된다.

주목할 부분은 효과를 객관적 지표로 입증하는 방식이다. 만족도뿐 아니라 노인우울척도(SGDS-K), 체력 지표, 복약 준수율 등을 사전·사후 측정해 성과를 수치화하고 있다.

금천구가 2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한 것도 이러한 성과 입증이 뒷받침된 결과로 볼 수 있다.

G. 중장년 대상 사업(4~8월 주요 뉴스 분석 결과)

지자체	내용	성과
마포구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사회적 고립 위험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건강상담, 주치의 연계, 의료비 지원, 정서지원	95명 대상 건강검진 39건, 주치의 상담 527건, 의료비 지원 180건 서울시 성과평가 최우수 자치구
서대문구	50플러스 센터 참여형 교육-문화예술·지역활동·디지털 기존 교육 수료자가 강사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주도형 운영	15개 커뮤니티 150명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으로 고립·은둔 중장년 「마음 회복 프로그램」운영	-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신사의 품격」-걷기·러닝 실습, 마라톤 참가 목표, 보건소 연계 영양교육·인바디 측정	40~65세 대상
종로구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웰다잉(Well-Dying) 교육	-
서대문구	중·노년 남성 요리교실 「오늘은 나도 셰프다」가사 자립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	-

시사점

중장년 1인 가구와 고립 문제가 통합돌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통합돌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마포구 사례는 중장년 대상 사업으로 통합돌봄 성과평가 최우수를 받은 사례로, 중장년 사업이 통합돌봄 성과로 평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남성 1인가구를 별도 대상으로 설정한 사례(영월·서대문)가 눈에 띄며, 요리·운동 등 생활 자립을 매개로 접근하는 방식이 공통적이다.

H. 민관 협력 거버넌스(4~8월 주요 뉴스 분석 결과)

경상남도	「경상남도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지역 통합돌봄 계획 수립, 정책 자문,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기구
횡성군	2026년 제 1차 통합지원협의체 개최. 건강보험공단·의료기관·복지기관·주거복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양천구	「민·관 협력 통합돌봄 특화사업」-방문진료·간호·재활, 심리지원, 가사지원 등 34개 기본 연계 서비스. 한방주치의, 퇴원환자 연계, 약물안전 케어, 생활수리 지원 등 특화사업
영암군	「효도복지마을」-주민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설계하는 마을 단위 모델. 11개 읍면에 돌봄거점 구축. 관계부서·대학·시니어클럽·사회적협동조합이 협업회의 참여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케어링크360」실증사업-의료·돌봄·영양·자활 6개 기관 컨소시엄으로 고위험 재가노인 돌봄 공백 해소
강원도	도·시군·사회서비스원 협력 간담회. 권역별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논의. 농산어촌 인력 부족, 장거리 이동 서비스 공백 등 현안 제기

시사점

횡성군 사례에서 보듯 통합지원협의체에 건보공단·의료기관·복지기관 등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다.

영암군은 시니어클럽·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마을 단위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6개 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V 종합 및 후속 확인 사항

사례 검토 종합

- 시행 초기 지자체의 과제는 조직·인력 확충(유형A)에서 대상자 발굴(유형B)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임
- 발굴 방식은 행정 조사에서 생활 접점 활용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통장·집배원·의료기관 등 행정 외부 채널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서비스 측면에서는 주거 결합형(케어안심주택)과 예방 중심 프로그램이 두 축을 이루고 있음
- 중장년 1인가구·고립 문제가 통합돌봄의 새로운 대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도 대상 확대 방침을 밝힘
-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건보공단·의료기관·복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임

VI 참고자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415호(2024).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주도한 통합돌봄 성과, 내년 제도 시행 앞두고 전국 확산 가속」보도자료(2025. 12.)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관련 국민 인식조사(2026. 6.).
- 서울신문, 통합돌봄 시행 100일 관련 보고(2026. 7. 2.).
- 서동민, 「돌봄통합지원법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2025년 2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애정·박현경,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d04300m01.do>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0225#0000> (돌봄 통합지원 시행령)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0255#0000> (돌봄 통합지원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주도한 통합돌봄 성과, 내년 제도 시행 앞두고 전국 확산 가속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148&act=view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https://www.pha.or.kr/upload/pdf/pha-22-7.pdf>
-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재가 기반의 사회서비스 현황과 주요 쟁점
<https://www.kihasa.re.kr/api/external/viewer/doc.html?fn=29074:1147597728374007952746.pdf&rs=/api/external/viewer/upload/kihasa2021/publish>
- 통합돌봄 100일 국민 10명 중 4명 “시행 몰랐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7/02/20260702500157>
- “돌봄도 도시 기본 기능” 춘천시, 2028년 ‘생애주기 통합돌봄’ 완성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2416205912166>
- 춘천시, 부서 벽 허문 ‘춘천형 통합돌봄’ 실무협의체 가동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52309585045815>